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산재추방운동연합,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건강연대/ 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시 사회복지사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

연락단체 : 참여연대(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참여연대(이은경 : T. 723-5056 F. 723-5055)

사무금융노련(김금숙 : T. 312-3933 F. 393-3522)

제 목 : 사회복지예산 확대촉구 집회에 관하여

날 짜 : 1999. 9. 14(총 4매)

보 도 자 료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집회 -

일 시 : 1999. 9. 14 (화요일) 11 : 00

장 소 : 기획예산처 정문

1.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건강연대,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한 20여개 시민·노동·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은 9월14일(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강남 기획예산처 앞에서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 이들은 “현재 드러난 정부여당의 2000년 예산(안)은 대통령의 8.15경축사 및 각 부처에서 후속으로 발표한 ‘생산적 복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예산안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생색용 또는 총선 득표전략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였다.

3. 또한 이들은 이미 9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정부여당의 예산

편성의 원칙과 협의 과정을 밝힐 것"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생산적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여당의 예산안 협의·결정과정에서 참가한 의원과 행정담당자를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향후 국회 예결위도 공개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들은 집회에서 복지에산을 30%증액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과 복지관련 예산의 매년 10% 증액을 요구하면서 여성, 보건, 노동, 복지에산의 확충을 요구하였다. 특히 실직자 및 예비실직자의 취업과 훈련을 위한 정책과 예산배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노동부의 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유일한 실업대책으로 하고, 고용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라고 비판하고 노동시간 단축 연구, 구조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 방안 마련 및 직업전환 훈련과 교육을 위한 예산배정과 노동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공유와 노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5. 또한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시민·노동·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랫돌 빼서 윗돌 맞추기'식의 술책을 부리면서 보건의료부분의 예산을 복지분야로 이전하는 것은 시민단체 상호간의 내부분열을 조장한다는 의심마저 받을 수 있는 비열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전체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이들은 복지에산의 확충방안에 대해 정부가 세수부족, 긴축재정 핑계를 달 것 이 아니라 세제와 세정을 개혁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조세 형평을 달성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근본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성장위주의 시대를 종식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각자가 기본적 생활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였다.

7. 이날 집회를 마치고 지은희 대표(한국여성단체 연합), 허영구 부위원장(민주노총), 백종만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장) 박주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로 합의단을 구성하여 기획예산처장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장관실을 향의 방문하였다. 끝.

* 별첨 : 성명서 1부.

성명서

- 예산없는 생산적 복지, 허구일 뿐이다 -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가닥이 잡힌 2000년도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접하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고통과 성공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적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역설하고, 8·15 경축사에서 이 이러한 기조하에 서민생활의 향상과 중산층 육성에 힘쓰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도 다양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생산적 복지'가 예산이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바탕의 대국민 기만극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선언이 진실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예산기조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복지, 노동, 보건, 여성, 교육,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을 실현할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정부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자재정 해소라는 이름하에 긴축예산기조에 밀려, 껌데기만 남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보호이다.

특히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생산적 복지'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에서 요란하게 제시한 세부추진계획은 그 시행첫해에 이미 사문화된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이 6.2% 삭감되었고, 보건부분 예산은 무려 18.1%가 삭감되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관련 예산도 교육과 훈련분야 및 고용정보관련 인프라 구축 부분등에서 총 30.5%가 삭감되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제시한 추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3년 시점에 이르러 올해보다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매년 10%씩의 부처예산증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은 4.5%증액에 그치고 있고, 특히 내년 10월에 실시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준비를 위한 예산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복지를 '시혜적' 수준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복지철학의 빈곤이거나 국민 기만극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노동부예산의 경우 노동통제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생산과 발전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고, 생산과 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랫돌 빼서 윗돌 맞추기'식의 보건의료부분과 복지관련 예산 조정은 시민단체 내부분열을 조장한다는 의심마저 받을 수 있

는 비열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정부여당의 예산편성 원칙과 협의 과정을 공개 할 것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예산안 협의·결정과정에 참가한 의원과 행정담당자를 공개하고, 나아가 향후 국회 예결위도 공개하여 예산편성 및 결정과정에서 '나뉘먹기식' 의혹을 불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세수부족이니 긴축재정이니 하면서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세제와 세정을 개혁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성장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각자가 기본적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 예산편성은 일시적으로는 국민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노동자, 농민, 서민 등 국민들의 총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예산안 편성과정을 공개하고 국회 예결위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혜적' 사고 수정하라!
- 복지에산을 30%증액한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매년 10%씩 증액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예산을 2000년 예산안에 즉시 반영하라!
- 조세제도 개혁하여 여성, 보건, 노동, 복지, 환경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1999. 9. 14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산재추방운동연합,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 건강연대/ 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